

##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5. (월)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선거날도 출근 안 한다, 유명무실 선관위원	정치	톱
2	희귀식물 불법으로 심고 파는 '식테크' 기승	사회	
3	국힘 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장 선거무효' 선거소청 제기	사회	

###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나온 중앙선관위원은 비상임인 노태약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사퇴)과 위철환 상임위원(현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2명이었다. 14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7명은 나오지 않았다.

비상임이더라도 최소한 선거 당일은 사무실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들은 회의가 소집되면 출석해 안건 의결에 참석할 뿐, 지방선거 당일에 통상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선관위 운영 체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8명 중 위원장·상임위원 등 5명만 3일 청사나 개표 상황실에 나왔다.

그런데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관위 긴급회의는 4일 0시에서야 소집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 회의도 당초 열지 않으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을 하면서 잡혔다고 한다.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된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방송사 출구 조사와 개표 방송을 보면서 투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4·19 혁명 3년 후인 1963년 설립된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부여받았다. 법조인·학자 중심의 선관위원들과 실무 담당인 사무처가 이원화된 체제로 60여년을 끌고 왔는데, 이번 사태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런 문제점은 2022년 3월 5일 대선 사전투표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이미 드러났다.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조차 그 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에선 선관위는 "비상임이라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긴급 위원회는 이를 뒤인 7일에야 열렸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들을 상임으로 바꾸고 '선거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탈리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화상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론 전파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도 했다.

**요점: 6·3 지방선거 당일 비상임위원 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들은 회의가 소집되면 출석할 뿐, 지방선거 당일에는 통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운영 체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 (2)기사/뉴스요약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려 식물 키우기'가 유행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중고 마켓에서 불법 식물 거래가 늘고 있다. 불법 거래된 식물은 바이러스와 병해충을 확산시킬 수 있다.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잡종이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지가 14일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희귀 관엽식물 '몬스테라 잎'을 검색해보니 판매 중인 글이 24건 올라와 있었다.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도 판매 글이 20여 건 검색됐다. 이 식물은 한때 잎 한 장이 수십만~수백만 원에 거래되며 '식테크(식물+재테크)' 대표 품목으로 꼽혔다. 현재 중고 거래 사이트에도 23~25cm 길이 몬스테라 잎이 30만~43만원에 판매되

고 있다. 판매자들은 대부분 모주(번식을 위한 어미 식물)를 통해 몬스테라 알보를 증식해 팔고 있었다.

개인이 식물을 증식해 판매하려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물 씨앗이나 묘목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중고나라에 판매 글을 올린 A씨는 "종자업 등록은 하지 않고 취미로 몬스테라 잎을 증식해 팔고 있다"고 했다. A씨처럼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식물을 임의로 증식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최근 계속 늘고 있다. 단속 당국인 국립종자원이 적발한 불법 온라인 종자 거래는 2021년 4건이었는데 2025년엔 39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종자 거래가 많아져 올해 3월부터는 상시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다"며 "3~5월 석 달간 불법 종자 판매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라인상 불법 종자 거래 현황을 보면 적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판매자가 허위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국립종자원 요청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만들어 판매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한 중고 거래 업체 관계자는 "개인 판매자의 종자업 등록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요점: '반려 식물 키우기'가 유행하는 것과 맞물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중고 마켓을 통해 불법 식물 거래 사례가 늘고 있다.**

### (3)기사/뉴스요약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형철(연제구2) 의원은 15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6·3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산 지역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각종 관리 부실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부산 일부 투표소에서는 교부된 투표용지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투표 당일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최종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지 전면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박형준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선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0.52%를 득표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47.90%)를 2.62%포인트(p)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3선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신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는 26일 퇴임한다.

**요점: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6·3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식테크	식물과 제테크의 합성어로, 식물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키우기 어렵거나 희귀한 품종들이 식테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사상식사전
2	청년미래적금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원금과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2026년 6월 출시 예정이다. 상품 만기는 3년이며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다.	시사상식사전